

# 서울시, 코로나19 취약 노숙인 위생·안전관리 ‘온힘’

### 확진자발생대비 이용자명단 관리 돌봄서비스 제외 지원 잠정중단 사위실 하루 2회 소독 등 예방강화

서울시가 감염병에 취약한 노숙인과 쪽방촌 주민들을 위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시내에는 종합지원센터(3곳)·일시보호시설(4곳)·희망지원센터(2곳)·무료급식장(1곳)·무료진료소(2곳) 등 총 12개의 노숙인 지원시설과 창신동·남대문·영등포·돈의동·서울역 쪽방상당소 5곳이 운영되고 있다.

시는 복지 취약계층인 노숙인과 쪽방촌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활용한 감염 확산 방지 ▲노숙인 이용서비스 잠정 중단 ▲필수

돌봄서비스 유지 및 방역 관리 등을 추진한다.

우선 시는 노숙인 시설 이용자 명단을 관리한다. 무료 급식·취침 시설을 이용하는 노숙인 중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 밀접접촉자를 신속하게 분류·격리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마스크 지급, 체온 검사, 방역·소독, 손 씻기 교육 등 노숙인·쪽방주민 복지시설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대책을 강화한다.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와 일시보호시설은 필수 돌봄서비스를 제외한 지원을 잠정 중단한다. 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긴급 의료 조치 외에 시설 내 자라·주거 상담 지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노숙인의 안전 관리를 돕는 거리 상담과 위기대응콜, 일시보호 기능은 지금과 같이 유지된다.

개인 위생관리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노숙인 이용시설 내 샤워실을 하루 2회 소독하고 감염병 예방을 위해 이용자 간 안전거리를 유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세탁서비스도 정상 운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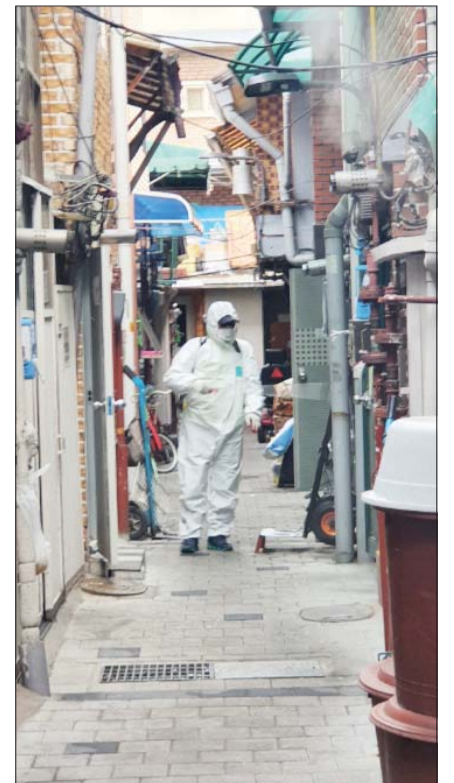
시는 노숙인들이 긴급적 침대가 설치된 시설(다시서기·브릿지 종합지원센터, 만나샘)을 이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온돌식 응급잠자리는 이용자 간 간격을 최소 50cm 이상으로 유지한다.

노숙인을 대상으로 한 무료급식의 경우 사람 사이의 간격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고 컵밥 등을 제공해 식사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한다. 시는 도시락을 제공하면 노숙인들이 지하철역 등 거리에서 식사를 하게 돼 오히려 불특정 다수와 접촉하게 되고 시민 불편 및 민원 발생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노숙인 진료시설은 감염예방 및 보호조치를 준수, 현행 기능을 유지한다.

쪽방상당소는 마스크·손소독제 등 기초생활용품 및 민간후원 생필품 지원, 편의시설(샤워실, 세탁실, 화장실) 운영 등 필수서비스 위주로 전환된다. 시는 자활·자립 문의를 가급적 전화상담으로 대체하고 주민들이 편의시설 이용 후 바로 귀가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노숙인 이용시설은 코로나19 의심환자 발생 시 119 구급대 도착 전까지 별도의 격리 공간에서 이들을 보호한다. 확진자가 나오면 밀접접촉자를 보호 관리하고 신병확보가 안 된 노숙인은 전 시설에 명단을 공유, 이용을 제한하고 발견 시 격리 조치한다.

시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보건복지부 권고사항을 검토해 시행한다”며 “노숙인과 쪽방촌 주민의 감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돈의동 쪽방촌 방역 모습. /서울시

## 보증금 30% 무이자 ‘장기안심주택’ 대상자 모집

(4500만원 한도내)

### 서울시, 2012년부터 9974호 지원 전체 중 40% 신혼부부 특별 공급 오는 5월 입주 대상자 발표 예정

서울시는 전월세보증금의 30%를 최대 4500만원 한도 내에서 무이자로 가장 10년간 지원받을 수 있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 5000명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입주자가 자신이 살고 싶은 지역 내 주택을 임차해 거주할 수 있도록 전월세보증금을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 사업이다. 시는 2012년부터 작년 말까지 총 9974호를 지원했다.

전체 40%인 2000명은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으로 선정한다. 신혼부부가보증



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최대한도는 6000만원이다. 보증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 보증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계약은 2년 단위로 이뤄지며 최대 10년간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자는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 100% 이하(신혼부부의 경우 120% 이하)인 가구다. 소유 부동산은 2억 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 가치 2764만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이다. 주택의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9000만원 이하, 2인 이상의 가구의 경우 최대 3억 8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전용면적은 1인 가구의 경우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여야 한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2일 홈페이지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3월 19일부터 31일까지 인터넷으로 신청을 받은 후 5월 22일에 입주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 서울시민, 만원내면 반려견 유실 예방

서울시는 3월부터 반려견의 유실·유기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내장형 동물등록제’를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서울지역 600여개 동물병원에서 1만 원만 내면 반려견에 내장형 마이크로칩 동물등록 시술을 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서울시민이 기르는 모든 반려견이며 올 연말까지 한정수량으로 4만마리에 내장형 동물등록제를 선착순 지원해준다.

동물등록을 하면 각 동물에 15자리 고유번호가 부여된다. 이를 통해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해당 번호 동물의 이름, 성별, 품종, 연령, 소유자 인적사항 등을 관리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특히 ‘내장형 동물등록’은 쌀알 크기의 무선식별장치(마



내장형 마이크로칩 시술. /서울시

이크로칩)를 동물 어깨뼈 사이 피하에 삽입하는 방식으로 체내에 칩이 있어 외장형 칩이나 등록인식표에 비해 훼손·분실·파기 위험이 적다”며 “만약 유실 사고가 생기더라도 내장형 칩이 있기 때문에 소유자를 빨리 파악해 연락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 코로나19 여파에 10명 중 3명 서울 대중교통 안탔다

### 시차출근제, 재택근무제 등 영향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병률이 증가한 이후 대중교통 승객수가 약 31% 줄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대중교통 이용객 수는 코로나19 사태 초반인 1월 29일~2월 2일 평일 5.6%, 토요일 18.0%, 일요일 18.3% 감소했다. 이후 2월 17일~2월 23일에는 평일 10.2%, 토요일 29.5%, 일요일 34.7% 줄었다.

특히 지난달 23일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다음날(2월 24일)부터 2월 28일까지는 평일 대중교통 이용객이 평소 대비 30.9%까지 급감했다.

지하철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 등 무임 승객수가 4주차 주말(2월 21일)에 46.3%까지 줄었다. 5주차 평일에는 42.0% 감소했다.

택시 영업건수도 발병 이후 4주차(2월 17일~2월 23일)에는 평일 8.5%, 토요일 16.7%, 일요일 24.9% 감소했다. ‘심각’ 단계에 접어들던 5주차에는 평일 택시 영업건수가 29.2%까지 대폭 줄었다.

자동차 통행량도 발병 이후 4주차에는 평일 3.2%, 토요일 7.0%, 일요일 11% 감소했고 5주차에는 평일 자동차 통행량도 7.5%까지 줄었다.

주말 통행의 경우 국내 발병 후 1주차부터 대중교통 이용객 수는 18.3%, 택시 영업건수 12.8%, 자동차 통행량 8.5% 감소했다. 4주차 주말에는 대중교통 이용객 수 34.7%, 택시 영업건수는 24.9%, 자동차 통행량은 11.0%까지 줄었다.

시간대별로는 평소 통행량이 많은 출근시간대(오전 7~9시)의 경우에는 발병 후 4주차에 대중교통 이용객 수가 약 2.6% 감소했다. 택시 영업건수는 약 6.

6% 줄었고 자동차 통행량은 약 1.4%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심각’ 단계로 격상된 5주차에는 출근시간대 대중교통 이용객 수 17.9%, 택시 영업건수는 19.9%로 평소보다 대폭 줄었다. 자동차 통행량은 1.2%로 4주차와 비슷한 수준으로 감소했다.

퇴근시간대(오후 6~8시)의 경우는 발병 후 4주차 대중교통 이용객 수가 6.0%, 택시 영업건수가 6.7%, 자동차 통행량이 2.2% 감소했다.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올라간 5주차에는 대중교통 이용객 수는 24.0%, 택시는 27.3%, 자동차는 1.9%까지 감소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기관 시차출근제 시행, 대기업 재택근무제 확산 등으로 인한 출퇴근시간 분산효과와 함께 코로나 확산으로 시민들이 불필요한 통행을 자제한 영향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 서울교통공사 “지하철서 이런 행동 범법”

서울교통공사는 1일 지하철 역사, 플랫폼, 전동차 등에서 종종 일어나는 범법행위의 유형과 이에 대한 처벌 법규를 소개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지역 사회로 확산하면서 지하철 안에서 장난으로 자신이 확진자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가 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월 말 부산 지하철과 KTX 동대구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를 가장해 연기한 후 이를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 사건이 있었다. 허위사실을 유포해 위계와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형법 314조(업무방해) 등 여러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지하철 역사내 1인 시위 자체는 잘못된 행위가 아니지만 단순한 의견표출을 넘어 큰 소리를 지르거나 1인 시위로 인해 이용객들의 이동 동선에 지장이 생기면 공사의 여객운송약관에 위배될 수 있다. 또한 철도안전법 제48조(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및 경범죄처벌법 제3조(불안감 조성, 인근 소란)에도 저촉된다. /김현정 기자



7호선 열차 내에서 술에 취한 노인이 다른 승객을 위협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만약 해당 행위가 약관이나 법에 저촉될 경우 역 직원은 즉시 퇴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퇴거 거부 시 범법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

이용객이 많은 지하철 내 폭력·폭언도 기본적인 형법 위반이다. 특히 그 피해자가 직원이라면 철도안전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김현정 기자